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1. 취업제한 제도

취업제한의 목적

재직 중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특혜 부여 등
부정한 유착 사전 차단

취업 후

소속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배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윤리법 강화

세월호 사고 이후 고질적인 민관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대폭 강화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14.6.25.]

- * 영리사기업체 범위 확대, 취업심사대상 협회 범위 확대 등

- 공직자윤리법 개정 ['14.12.30.]

- * '15.3.31. 시행

- * 취업제한기간 확대, 취업제한기관 확대(비영리분야로 확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등

- ※ 부칙: § 17①,③,⑥,⑦, § 18①, § 18의2②, § 18의3①, § 19의2①, § 19의4, § 29각호외의 부분,

§ 30③4호는 **이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취업제한 주요 내용

취업제한 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

※ 재산등록의무자 : 일반적으로 4급 이상, 특정분야 7급 이상

취업제한 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시장형공기업, 안전감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 기간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 기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

취업 절차

취업을 하려는 자는 취업 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 요청하거나 **취업승인** 신청하여야 함

취업제한제도 운영절차

- ① 재산등록의무자가 ②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 ③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2급 이상의 경우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심사 · 결정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하려는 경우

<취업 승인 신청>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취업하려는 경우

소속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취업가능
결 정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결 정

취업승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

취업승인
사유가
없는 경우

취업불승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 ①부서(3급이하 퇴직공직자 해당)
 - 과장 · 과원은 과 , 그 상위직의 간부는 지휘 · 감독 부서의 업무
- ②기관(2급이상 퇴직공직자 해당)
 - 소속기관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

취업심사 대상자 / 기간

- 취업심사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 4급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 * 감사원 · 경찰 · 소방 · 국세청 · 관세청 · 국방계약 · 건축 · 식품위생 등
 -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원자력 관련 등
- 취업심사 기간 : 퇴직 후 3년
 - '15.3.30. 이전 퇴직자는 퇴직 후 2년



취업제한기관 (15,687개)

구 분	지정기준	대상기관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14,214개
법무/회계법인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25개/31개
세무법인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34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1개
협회	영리사기업체(13,505개) 가입 법인 · 단체	[개별 확인필요]
'15.3.31.이후 퇴직자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4개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179개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법, 학교법인/사립학교	651개
종합병원 등	의료법, 종합병원/종합병원 개설 법인	469개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160개

취업의 범위

상근, 비상근, 직위나 직책 여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문 등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으로 본다

-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의 취업제한 입법취지 고려 시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까지 취업의 범위 포함 가능

※ 대법원 판례('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 계약이 고용/도급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



대상자별 업무의 적용범위

2급 이상 :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 '15.3.31. 이후 퇴직자에 한함

- 중앙행정기관의 **본부/본청**에 근무한 경우
 - 본부/본청의 전체업무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
 - * 기관장/비기관장 차등 적용, 처리건수/빈도/비중 등 고려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근무한 경우
 -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

3급 이하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 직제 · 정관 또는 직무상 지휘 ·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최소단위,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

시행령 제32조제2항

1.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재정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 검사·감사에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의 계약에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업무
7.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에 관계되는 업무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에 관계되는 업무

취업 승인

제 도 개 요

- 업무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나
- 국가 경쟁력 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 승인

신 청 대 상

- 퇴직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업무와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 청 기 관

-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

제 출 서 류

- 취업승인신청서
- 취업예정확인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시행령 제34조

1. 국가안보,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에 따라 의사에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 취업제한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4.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발전,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6.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임용 전 종사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과 소속 직원의 경우로서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빈도와 취업 후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심사 절차

취업예정자

- 신청서 제출(퇴직전 소속기관)
 - 취업제한여부확인 요청서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
-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 취업예정확인서

소속기관

- 제출서류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 사기업체등 해당 여부
 - 업무관련성(취업승인 해당) 여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장에게 제출
 - 요청서, 검토의견서, 입증자료 등

관할 공운위

- 취업심사 결정
 - 확인 : 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 승인 : 취업승인 또는 취업불승인
- 심사결과 통지
 - 요청인, 소속기관의 장

중앙 및 지자체

- 소속기관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최종 검토의견서 작성
-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여부 조사

대 상 자

취업제한 대상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조 사 방 법

국가기관 등이 직접 확인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여부 조회

조사결과 보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매 반기별)

임 의 취 업 자 제 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생계형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외
- 업무관련성 있는 경우 취업해제 조치
(해임요구, 형사고발)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

해 임 요 청

-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제한위반자에 대한 해임조치 요구
- 해임조치결과 보고 : 해당 취업제한기관 → 소속기관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

- 해임요구 · 자료제출 거부 취업제한기관의장 과태료 부과
※ 각 1천만원, 2천만원 이하
- 취업제한위반자 고발 조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형소법 제249조)이므로 취업제한기간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발 가능



2.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등

업무취급제한 제도

입법 배경

사전 취업제한제도로 규율 할 수 없는
퇴직 후 이해충돌 방지 위해 일정한 업무를 제한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강화 취지

목 적

공익·사익 간의 이해충돌 방지

※ 취업제한대상자가 아니거나, 취업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심사 없이 취업하거나 개업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법 제18조의2제1항)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는 퇴직 후 취급을 금지

적용대상자

퇴직한 **모든** 공직자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취급금지 기간

영구

위반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의 처리

직제 · 정관 · 규정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

비교

업무의 취급

본인 또는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취업 또는 개업 여부와 무관]

< 적용사례 >

금지되는 경우

① 재직 중 A하천 골재채취 **허가**를 하고 퇴직 후 B기업에 취업하여 A하천 골재채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② 재직 중 A기업과 B통신망 구축**계약**을 체결하고 퇴직 후 C통신회사를 설립하여 A기업과 B통신망 구축사업의 하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지되지 않는 경우

① 재직 중 **소속한 부서**에서 A,B,C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업무 중 A단체에 대한 보조금 업무를 처리하였고, 퇴직 후 B단체에서 보조금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② 재직 중 부장이었는데,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과장이 A회사에 대한 계약 업무를 **전결한** 사실이 있는데, 부장이 퇴직 후 A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계약에 따른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법 제18조의2제2항)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2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취급을 제한

적용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2급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일정업무

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취급금지 기간

퇴직 후 2년간

업무내역서 제출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을 퇴직 후 2년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퇴직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위반시 제재

[업무취급제한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업무내역서 미제출 등]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업무취급승인 : 국가안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적용사례 >

금지되는 경우

- ① 퇴직 전 2년간 A기관에 근무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B기업에 취업하여 A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 업무를 퇴직 후 2년 내 B기업에서 취급하는 경우
- ② 퇴직 전 2년간 C검찰청 검사장으로 근무 후,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D법무법인에 취업하여 C검찰청에서 수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내 수임하여 취급하는 행위

금지되지 않는 경우

- 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 3년 전에 소속했던 기관이 취업한 A기업과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업무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급하는 경우
-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2년 경과 후에 B기업에 취업하여 퇴직 전 1년간 소속했던 기관의 B기업에 대한 직접 감독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부정한 청탁 · 알선행위 금지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금지

내 용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직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위반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재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행위 신고

신고내용

청탁을 한 퇴직 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을 한 일시·장소, 청탁의 내용 등

위반시 제재

징계의결 요구



3. 취업이력공시제도

취업이력공시제도 주요 내용

공시 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퇴직공직자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15.3.31.이후 퇴직자)

주요 내용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
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공시

공시 장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항목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 또는 직급

취업사실 신고 주요 내용

신고 대상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인 퇴직공직자 ('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신고 시기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신고 내용

성명, 퇴직일, 퇴직 전 소속기관명 및 직위·직급, 취업
제한기관명, 취업일, 직위 등을 포함한 취업사실 신고

제출 서류

취업사실 신고서, 취업사실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등)

신고 절차

퇴직공직자 →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소속 중앙행정
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Q & A 및 당부사항

- 취업심사대상자 요건
 - 취업심사 신청 시 퇴직 여부, 취업개시 30일 전 신청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취업승인 신청 구분
 - 취업제한기간(3년), 업무관련성 적용기간(5년) 구분
 - 개정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사람
 - 국 · 공립대학, 국립대병원 취업제한기관 해당 여부
- *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없음
- 취업제한기관인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퇴직자 재임용
 - 담당업무가 아닌 부서 또는 기관업무 단위로 관련성 판단
 - 요청서는 저용량으로 스캔 당부(농도는 낮게, 선명도는 높게)

0001010101010101001001

010100010101010101001001

감사합니다